

2010.12. 14(화)

제1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조 병 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부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조정과 세출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임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총 계		361,100	367,000	△5,900
일반회계	계	338,700	341,700	△3,000
일반회계		338,700	341,700	△3,000
특별회계	계	22,400	25,300	△2,900
의료급여기금		439	439	0
농공지구관리		652	652	0
치수사업		11,184	13,838	△2,654
경영사업		4,462	4,720	△ 258
폐기물처리시설사업		5,570	5,565	5
기반시설		93	86	7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61,100	367,000	△5,900	△ 1.61
일 반 회 계	계	338,700	341,700	△3,000	△ 0.88
	지방세수입	77,036	71,036	6,000	8.45
	세외수입	51,531	63,309	△11,778	△18.60
	경상적세외수입	9,851	9,064	787	8.68
	임시적세외수입	41,680	54,245	△12,565	△23.16
	지방교부세	89,005	88,998	7	0.0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4,778	13,213	1,565	11.84
	보조금	106,350	105,144	1,206	1.15
	국고보조금등	72,206	71,099	1,107	1.56
	시·도비보조금등	34,144	34,045	99	0.29
특 별 회 계	계	22,400	25,300	△2,900	△11.46
	세외수입	22,041	24,941	△2,900	△11.63
	경상적세외수입	8,042	10,783	△2,741	△25.42
	임시적세외수입	13,999	14,158	△ 159	△ 1.12
	보조금	359	359	0	0.00
	국고보조금등	287	28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72	72	0	0.00

○ 총액인건비 40,586백만원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가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총 계		361,100	367,000	△5,900	△ 1.61
일반 회 계	계	338,700	341,700	△3,000	△ 0.88
	일반공공행정	17,204	17,987	△ 783	△ 4.35
	공공질서및안전	15,574	14,174	1,400	9.88
	교육	7,987	8,054	△ 67	△ 0.83
	문화및관광	14,002	14,049	△ 47	△ 0.34
	환경보호	7,185	7,286	△ 101	△ 1.39
	사회복지	84,156	84,694	△ 538	△ 0.64
	보건	7,199	7,018	181	2.58
	농림해양수산	42,249	43,172	△ 923	△ 2.14
	산업·중소기업	471	532	△ 61	△11.54
	수송및교통	53,685	54,344	△ 659	△ 1.21
	국토및지역개발	31,802	32,551	△ 749	△ 2.30
	예비비	6,945	6,876	69	1.00
	기타	50,241	50,963	△ 722	△ 1.42
특별 회 계	계	22,400	25,300	△2,900	△11.46
	환경보호	5,570	5,565	5	0.09
	사회복지	359	359	0	0.00
	국토및지역개발	15,937	18,842	△2,905	△15.42
	기타	534	534	0	0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361,100	367,000	△5,900	△ 1.61
일 반 회 계	계	338,700	341,700	△3,000	△ 0.88
	인건비	43,662	44,479	△ 817	△ 1.84
	물건비	18,487	18,713	△ 226	△ 1.21
	경상이전	118,196	119,566	△1,370	△ 1.15
	자본지출	145,249	146,012	△ 763	△ 0.52
	시설비및부대비	125,716	125,971	△ 255	△ 0.20
	민간자본이전	16,621	17,105	△ 484	△ 2.8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18	512	6	1.19
	자산취득비	2,394	2,424	△ 30	△ 1.23
	융자및출자	0	30	△ 30	△100.00
	보전재원	1,797	1,797	0	0.00
	내부거래	2,195	2,195	0	0.00
	예비비및기타	9,114	8,908	206	2.32
	예비비	7,072	6,876	196	2.86
	반환금기타	2,042	2,032	10	0.49
특 별 회 계	계	22,400	25,300	△2,900	△11.46
	인건비	475	475	0	0.00
	물건비	5,612	6,789	△1,177	△17.34
	경상이전	380	380	0	0.00
	자본지출	946	1,684	△ 738	△43.82
	시설비및부대비	946	1,684	△ 738	△43.82
	자산취득비		0	0	0.00
	보전재원	150	150	0	0.00
	내부거래	6,830	5,565	1,265	22.74
	예비비및기타	8,007	10,257	△2,250	△21.94
	예비비	7,921	10,171	△2,250	△22.12
	반환금기타	86	86	0	0.00

5. 2010년도 이월사업

○ 명시이월 회계별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합 계	112	67,356	40,979	
일반회계	112	67,356	40,979	
과학경제진흥실	1	60	50	- 사업비확보지연
회계과	1	4,263	3,147	- 보상협의 지연
주민생활지원과	1	50	50	- 시비 미확보
사회복지과	2	1,602	1,074	- 부지확보 지연
문화체육과	2	3,300	3,300	- 문화재발굴공사, - 부지확보 지연
교통행정과	1	1,072	298	- 공사기간 미도래
건설과	89	33,628	19,448	- 보상 협의지연 - 공사기간 미도래 등
도시시설과	2	1,900	700	- 손실보상 협의지연 - 간판교체 등의 지연
재난방재과	9	18,406	10,732	- 공사기간 미도래 등
농업기술센터	1	329	329	- 사업변경 착공지연
공원녹지과	2	1,177	647	- 편입부지 지주 미동의
보건과	1	1,568	1,205	- 토지보상 설계지연

6.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70억원 보다 59억원(감 1.61%)이 감소된 3,611억원으로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17억원 보다 30억원이 감소된 3,38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억원 보다 29억원이 감소된 224억원 입니다.
- 일반회계 중 예비비는 70억 7,236만 5천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소득할 주민세 24억 4천만원
재산세 1억 5천 8백만원, 자동차세 6억 9천 6백만원,
담배소비세 8억 8천 6백만원, 주행세 12억 4천만원,
도시계획세 2억 8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6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1천3백만원, 사업수입 6천 1백만원
사용료수입 4억 2천 2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천 4백만원,
이자수입 4억 4천만원, 전입금 12억 6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3억 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은 143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115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시책수요 교부금 특별교부세 6백 6십만원이
증가한 890억 4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증가분 15억여원이 늘어난

147억 7,7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1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1억 4천 9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 5,846만 8천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0억원이 감소된
총액 3,3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자체사업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2천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4천만원,
시설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3천만원을 증액 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 예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3억 5천 5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억원,

옥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2천 9백만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9천만원,

화원 설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3천만원,

논공 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천 2백만원,

다사 서재(천주교회뒤) 도시계획도로개설 3천9백만원,
 옥포 강림1리(금봉지 남동편) 도시계획 도로개설 4천 3백만원,
 현풍 성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천 2백만원,
 논공 삼리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5천 5백만원,
 논공 노이 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옥포 반송2리(진담불) 도로 확포장 4천만원,
 큰나무 식재 사업비 3억 5천 9백 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도로명 주소예비안내 사업비 6백 6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의 경우

화원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8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 8억 4천 6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억 4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및 인건비 1억 2천만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3천 1백만원,
 장애인 연금 1억 5천 7백만원,
 기초노령 연금 1억 5천 7백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1천 9백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2천 9백만원,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금 1억 4천 6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8천만원 등은 감액 계상 하였으며,

반환금의 경우,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분 등 1천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골재판매수입 등 매각사업수입 27억 4천 5백만원과,
이자수입 2백만원은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천 3백만원은 증액하여
총 26억 5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골재채취전별 및 상차건설 기계
임대료 등으로 11억 7천 9백만원,
하산적치장 장비임차료 1억 2천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장 철거 및 이설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올해 폐지되는 관계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6천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15억 1천 8백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5백 5십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 잉여금 5십만원이 감액되어
적립금에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7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분과 구 청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일부와 세출 전 분야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 세입부분에는 지방세분에 가용한 추정세입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구청사 매각수입 147억원 결손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년의 경우 결산 시 순세계 잉여금 형태로 반영될 사용료 수입 발생분, 이자수입 추가분 등을 금번 추경재원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부족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총액 기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9억원이 줄어든 3,61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경상사업 중 필수경비의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감소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2천만원,

화원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8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 8억 4천 6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5억 4백만원 등 법정 의무경비를 증액 추가편성하였으며

삭감사업 중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국비 2,500만원과 시도비 2,500만원, 생계소득 및 안정지원금 국비 8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6천여만원, 낙동강 녹색성장 박람회 경비 지원분 시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천만원은 당초 국시비 보조내시로 추진한 사업이 시비부담 변경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등 향후 복지분야 사업비에 대한 보조재원 탈루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입담보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흐름은 추경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해 금번 우리 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총액기준 감소 편성되는 것에 대하여는 세입결손의 주요원인이 된 구 청사 매각대금 14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추가 증액편성된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총액기준 59억원 감소에 거친 것은 비해 80여억원이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 예산규모의 부정확을 나타내고 자치재정의 안정성, 세입판단의 적정성을 비롯한 건전한 재정운용에 미흡한 일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의 정확성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은 재정판단이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만큼이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세입 세출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한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위해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은 예산서(안)에 의거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2010. 12. 1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발 의 일 : 2010년 12월 9일

2. 발 의 자 : 채명지 의원(대표발의)

3. 제안이유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 진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체육 및 장애인 관련 여러 법조항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 우리군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은 물론 장애인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④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있는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국 및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 급증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 사무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 및 실·과·소의 명칭변경 (안 제2조~제7조, 제15조, 제16조)

- 1)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국
- 2)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지원국
- 3) 과학경제진흥실 ⇨ 경제정책실
- 4)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지원과
- 5) 환경관리과 ⇨ 환경과
- 6) 교통행정과 ⇨ 교통과
- 7) 재난방재과 ⇨ 치수방재과
- 8) 휴양림 관리사무소 ⇨ 시설관리 사업소

나.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시설관리 사업소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안 제17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5조, 제117조~제12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있는 실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국 및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등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국 및 실·과의 명칭을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하도록 변경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 공공시설물의 증가에 따라 휴양림 관리 사무소를 시설관리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맞게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도모하였으며,
-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증원 가능 인력 중 미반영분에 대하여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을 위하여 정책개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문화·예술 등 당면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보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을 677명에서 694명으로 17명을 증원함 (안 제2조)

1) 집행기관 : 681명 (종전 665명 : 증 16)

○ 일반직 16명 (6급+3, 7급+3, 8급+4, 9급+6)

○ 기능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변동없음

2) 의 회 : 13명 (종전 12명 : 증 1명)

○ 일반직 (6급+1)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 (안 제4조)

1) 본 청 : 382명 \Rightarrow 394명 (증12명)

○ 일반직 : 증12 (6급 Δ 7, 7급+11, 8급+2, 9급+6)

2) 의회사무과 : 12명 \Rightarrow 13명 (증 1명)

○ 일반직 (6급+1)

- 3) 직속기관 : 99명 (변동없음)
- 4) 사 업 소 : 13명 (증 3명)
 - 일반직 : 증 3 (7급+2, 8급+1)
- 5) 읍 : 78명 \Rightarrow 79명 (증 1명)
 - 일반직 : 증 1 (6급+3, 7급 Δ 3, 8급+1)
- 6) 면 : 96명 (변동없음)
 - 일반직 (6급+6, 7급 Δ 6)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당면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 있는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새로운 과제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 집행기관의 정원은 665명에서 16명이 증가한 681명으로, 의회의 정원을 12명에서 1명이 증가한 13명으로 증원하는 것임.

- 이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가능 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되어 재정부담 능력에 차질이 없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제정이유

- 군민제안을 장려·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안의 내용

- 각종 제도개선방안 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나. 심사위원회 설치

- 접수된 제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다. 심사기준

- 창의성, 능률성·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실용성 및 군민편의 증진도 등

라. 창안등급 등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마. 제출보상 및 실시보상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 제출 및 실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관계법령

- 「국민제안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을 장려·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 채택된 제안이 타 자치단체와 상급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 추천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과학경제진흥실장)

3. 제정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2010. 7. 1 시행)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사실조사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의뢰기준(안 제3조)

-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협약체결 사항(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5.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 본 조례안은 입법 근거 규정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성안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⑬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개정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용자격 기준,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안 별표 1)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명시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초빙하는 경우 등)
- 다.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 및 교육 중 보수지급(안 제8조의2)
- 라.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제 근무를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기존에 규칙(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여 임용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용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 시간제 근무 도입 및 교육훈련 이수 기회 부여, 인사관리에 근무성적 평정결과 반영 강화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제9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개정이유

- 군민상 수상 부문의 과다로 가치가 실추됨에 따라 수상대상을 현행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우리군 으뜸상인 군민상의 위상을 제고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수상대상을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통합 (안 제2조제1항)

- 현행 6개 부문(지역사회봉사, 새마을, 문화, 체육, 효행, 산업)을 4개 부문(사회봉사·새마을, 문화·체육, 효행, 산업)으로 통합하여 군민상 위상과 가치 제고

나. 군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명확화 (안 제5조제2항)

다.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 (안 제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군민상 수상 부분의 과다로 가치가 실추됨에 따라 수상대상을 현행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기존의 6개 부문이었던 수상대상을 비슷한 부문을 통합하여 4개 부문으로 줄이고,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화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개정이유

- 다사읍 서재리 「서재휴먼시아A」의 준공 및 입주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아파트 주민간의 생활양식·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 매곡2리는 2008~2009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지구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나뉘어져 있는 마을에 인구가 급증하여 기존 하나의 행정리로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구역과 이장정수를 조정코자 함.

4. 주요내용

- 다사읍 서재 2리를 서재 2·10리로, 매곡 2리를 매곡 2·17리로 분리함
- 다사읍 서재리는 이장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매곡리는 16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함
- ☞ 달성군 이장정수 : 2명 증가(262명 ⇒ 264명)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다사읍 서재리의 신규아파트 준공 및 입주와 매곡리의 상업지구 신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기존의 행정리로 관할하기 어려움에 따라 행정구역과 이장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서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최근 다사지역에 신규아파트 건립과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사전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화합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장)
3. 개정이유

- 다사읍 서재리에 「서재휴먼시아A」가 준공되어 많은 세대가 입주하였고 매곡2리에 새로운 상업지구 신설 및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 리의 분리와 함께 행정 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개 리 25개 반 증가**(248개 리⇒250개 리, 1769반⇒1794반)

기 준		개 정		증감	비 고
행 정 리	반수	행 정 리	반수		
서재 2리	6	서재 2리	6	0	자연부락
		서재10리	22	22	서재휴먼시아아파트
매곡 2리	6	매곡 2리	4	▽2	자연부락
		매곡17리	5	5	자연부락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다사지역에 신규아파트 준공 및 입주, 새로운 상업지구 신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반을 조정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다사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 행정리 분리를 위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제정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9까지)
- 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다.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안 제46조까지)
- 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기 위한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기존의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분리하여 간소화 된 군세 세목을 명시하고,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이유

-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16개→11개)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규정을 군세 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와 장부비치·보존 의무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나.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다. 지방소득세의 세율 등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라. 재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마.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등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의 규정을 군세 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 간소화에 따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이유

- 2010.12.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 1. 시행)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감면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현행 감면 조례 중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10개 조항 삭제
- 나.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 명칭,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 반영
- 다.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안 제9조)
-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5. 관계법령

- 「지방세법」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 1. 시행)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사항은 감면기한을 201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지방세법」 분법 및 개정에 따른 세목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된 감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 달성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11. 12. 31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개정과 표준안에 근거한 적절한 후속 조치로 판단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장)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제증명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란 일부 항목의 요액 및 용어변경(별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000원 →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연장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 1통당 → 1건당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 칼라발급의 경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9조①항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후속조치로 판단 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장)

3. 제정이유

- 2014. 3. 1. 달성군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충효의 고장인 우리군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재단의 수행사업 구체화 (안 제4조)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나.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사업비 지원을 규정 (안 제5조)

다. 재단의 임·직원 임면, 임원 직무와 이사회 설치 (안 제7조~제10조)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 이사회는 재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함.

라.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 확보 (안 제12조)

- 마. 재단의 사업시행 절차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안 제13조~제16조)
 -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함.
 -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가능.
- 바. 군수는 재단에 대한 감독권과 공무원 파견 (안 제17조, 제18조)

5. 관계법령

-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 예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각종 사업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구심체로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관리과장)

3. 제정이유

- 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 12. 31 제정, 2010. 1. 13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저탄소 녹색 달성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등(안 제2조 ~ 제4조)

나.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8조)

- 1) 협의회는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의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로 기능 대신
- 2) 친환경상품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 3)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과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9조~13조)

-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
-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라.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촉진(안 제14조~제16조)

- 1)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지원
- 2)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 3)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5. 관계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설과장)

3. 개정이유

-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의 변경에 따라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합치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공익사업으로 감면적용 받은 경우의 점용료 부과 (안 제4조제3항)
 -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 미 부과하던 것을 개정법령에 따라 부과함
 - 예) 도시가스공사 관 매설시 점용료가 6,000원을 감면규정에 따라 1/2 감면받아 3,000원이 되는 경우 미 부과하던 것을 부과토록 함
- 나.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6제4항)
 - 주상복합건축물 관련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인 경우 주택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5. 관계법령

- 「도로법」 제42조
- 「도로법시행령」 제43조, 제45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의 변경에 따라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합치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조례안 타당성 검토

- 주상복합건축물처럼 주택 외 시설로 분류돼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점용료 산정 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점용료 면제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하던 것을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 상위 법령과의 합치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소장)

3. 제정이유

-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고 출산을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안 제3조)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영아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

1. 둘째아이 ⇒ 20만원
2. 셋째아이 이상 ⇒ 50만원

- 영아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1. 첫째아이 ⇒ 10만원
2. 둘째아이 ⇒ 70만원
3. 셋째아이 이상 ⇒ 150만원

5.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제9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아의 건강 유지·증진과 출산을 제고를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타당성 검토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인적자원 부족 등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제9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
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3. 어린이 안심보험료 : 어린이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소장)

3. 폐지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왔으나, 2008. 12. 31. 개정된 근거규정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 의거 과태료 부과

5.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폐지조례안의 취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 12. 31. 일부개정 되어, 우리 군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2. 폐지조례안 타당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됨.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10.12. 14. 14:00

제193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

제5기 달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흡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일 : 2010년 11월 1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과장)

3.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보건의료계획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제4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5. 주요내용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둘째,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 셋째,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 넷째, 개별보건사업 계획
 - 다섯째,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책자 5페이지입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달성, 건강과 행복이 꽃피다”로 선정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보건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분야 목적을 정하고 세부추진과제를 정하였습니다.
- 4대 분야의 목적은 군민평생건강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능력향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로 건강수명 연장, 군민이 공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 1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 지역 개황도를 보시면 달성군은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대구시내와 인접한 화원, 다사 등 일부지역은 급격한 도심화가 진행되고 화원, 다사, 논공 세 개 읍지역의 인구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구지나 유가지역은 3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가창, 하빈 지역도 20퍼센트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령화율은 9.7%로 대구시와 비슷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성과 대구 국가 과학산업단지 조성, 대단지 아파트 조성 등으로 특히 생산연령인구인 청장년층의 꾸준한 증가가 있습니다.

○ 15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걸쳐있는 지역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국, 대구, 달성군 모두 신생물 즉 암이 1순위이며, 그 다음이 뇌혈관, 심장질환 순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질환으로는 사망률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우리군 건강행태의 경우 대구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 그리고 낮은 운동 실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민의 관심도,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업별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1순위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주셨고 연령별로는 노인연령에 대한 사업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 81페이지입니다.

-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알기위해 지역사회 SWOT분석 및 보건의료에 대한 SWOT분석 및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가진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131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 지역의 보건소가 처한 여건과 환경, 내부역량과 자원에 적합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에 중점과제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중점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소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해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입니다.

○ 134페이지입니다.

- 중점과제 선정은 6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금년 6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한 후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 84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지역건강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주민 요구도를 분석하여서 중점과제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후보군을 대상으로 기획팀의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142 페이지입니다.

- 지역주민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건강문제 다섯 가지와 지역건강 현황조사에서 선정된 건강문제 여섯 가지 등 총 11가지 건강문제 중에서, 전문가 등 지역보건의료기획팀이 우선순위 선정 원칙에 따라 선정한 우리 군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강문제로 타 지역보다 “높은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선정되었습니다. 뇌혈관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혈압, 심장질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 162페이지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 접근전략을 건강문제, 결정요인, 기여요인으로 분류하여 도식화 된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도에서 보시듯이 중점과제인 ‘건강한 혈관지키기 생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생활 실천이나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관리에 덧붙여 달성군의 강점을 살린 한의약 건강증진 부분까지 세부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 4년 동안 보건소의 중점과제인 ‘건강한 혈관지키기 생활화’ 과제는

보건소 대부분의 가용자원, 즉 지원부서인 보건행정팀과 규제, 단속 부서인 예방의약팀을 제외한 전부서의 모든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영역이 되겠습니다.

○ 183페이지 개별보건사업계획입니다.

- 16개 사업영역을 185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 16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현황,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 근거한 개선방안, 사업목적, 사업목표, 활동전략,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357페이지 보건기관 체계정비 및 계획입니다.

- 보건기관 현황은 1과 4팀/8개 보건지소/9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비방안은 1과 6팀으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와 다양한 민원의 검사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제에 저출산대책팀 및 검사팀을 포함한 조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358페이지 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계획입니다.

- 시설의 노후, 공간 협소 및 위치적인 문제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계획기간 내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장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 보건지소의 경우도 테크노폴리스에 포함된 유가 보건지소와 공간이 협소하고 한방진료실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불편을 겪고 있는 가창면 보건지소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 보건진료소의 경우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5개소 중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구지 대암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해서 전체 9개소 중 8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본 계획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에 제출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 (2)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병 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 해 나감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과 건강관리의 주체성 향상에 목적이 있다 하겠음.
- (3) 또한, 지난 연도별 현황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추진성과와 문제점의 파악,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관련분야 종사자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4)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취약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서비스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5)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급격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보건시설과 인력운용에 능동성이 요구되며, 예산확보 등 사업계획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6)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추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